

광주지법에 쏠린 눈... 굵직한 사건들 재판 줄이어

‘학동 붕괴 참사’ 병합 첫 재판
전두환 항소심 연내 선고 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20일 재판
선거법 위반 양향자 의원 22일
수사기밀 유출 경찰 26일 재판
광주시체육회장 28일 선고 공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을 비롯, 정·관·법조계 이목이 쏠리는 사건들이 줄이어 이어지는데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괴로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법원 앞에서 개최하는 피해자들도 잇따르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만 17명인데 누구도 책임없다... 건물은 누가 무너뜨렸나=1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학동 재개발구역 감리자와 공사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해당 업체 현장소장·안전부장·굴삭기 기사 등 관계자들로,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차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애초 각각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붕괴사고와 관련된 쟁점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한 개 재판부로 모든 사건이 합쳐져 진행된 첫 재판이었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건물 붕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책임·관한 밖의 업무라며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는 너무 참담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5차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두환씨 항소심, 연내 선고될 지 주목=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이 11월 말 최종변론기일을 연 뒤 연내에 선고 될 것으로 점쳐진다. 헬기사격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실삼’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8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지막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주교 변호사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만든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입체(3D)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장투에 가까운 바닥탄흔, 전장 탄흔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모든 탄흔을 헬기에 의한 총격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채 분석했고, 1심이 이를 인정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받고 오는 11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리고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학·폭 가해 학생들도 법정=같은 재판부는 오는 20일 지법 302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첫 병합심리를 앞두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호 형사법정에서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집중 심리를 위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5명의 학생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지만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을 비롯, 10명의 가해학생들이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직접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과정도 관심사다.

◇양향자 국회의원도 천혜향 둘러 혐의로 법정=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오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양 의원에 대한 재판은 애초 15일 예정됐지만 양 의원측 요청으로 일주일 미뤄졌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잉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A씨도 이날 법정에 양 의원과 함께 선다. 양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벌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기밀 유출·사건 청탁 비리 어디까지=경찰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수사로 이번주 본격화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A경위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다.

A 경위는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 경위는 수사 제보를 목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사건 수임 청탁과 관련해 고교 선배인 변호사 사무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나서게 된

다. A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역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직장 선배였던 전직경찰 C씨도 최근 구속된 상태다.

여기다 검찰이 앞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A 경위와 고교 선·후배 사이인 전남경찰청 D 경위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인 2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A 경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D 경위에 대한 공소 사실에 거론된 경찰 이름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학연과 직장 인맥 등으로 얽힌 전·현직 경찰로 확대되는 양상이 감지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외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28일),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이날 예정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사건 처리 지연...영장 기각률 증가세

3개월 초과 사건 지난해 275건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증가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의원이 1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광주지검 내 미제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75건,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3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6개월 넘도록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지난 2015년 10건이던 데서 지난해 113건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미제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의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전 4676명인 광주지검 미제사건 피의자는 지난해에는 8365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시 단원구을)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52건으로, 45건이 기각돼 29.6%에 달하는 기각률을 보였다.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8.0%(2018년)→22.3%(2019년)→29.6%(2020년) 등으로 증가세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장실습 사망’ 여수 요트업체 산업안전법 위반 10건

고용노동부 조사 적발

업주 부실한 안전 조치

교육당국 관리 허술 드러나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은(18)군 사고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업주의 부실한 안전 조치와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여수 요트업체에 대한 재해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잠수 작업 과정에서만 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

났다. 업주는 잠수자격이 면허, 경험 또는 관련 기술이 없는 홍 군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하며 잠수작업을 시켰다는 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다. 또 잠수 전 잠수기와 압력조정기,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이뤄지는 잠수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위반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미게시 ▲MSDS(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등 설명자료) 교육 미실시 및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했다.

홍군의 사망사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산업안전보건법 166조의 2)이 처음 적용된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키시고 여수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를 진행했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도·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실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흥군 학교 등을 상대로 흥군의 현장실습 협약 과정, 참여기업 선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